광주 U대회 유치 비상 … 조건부 승인 문제점은

정부 지원 의지 실종 … 유치 활동 치명타

유치돼도 자금없어 인프라 구축 차질 불보듯

시민단체·상의 등 '조건부' 철회 강력 반발

정부가 광주시의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유치에 대해 사실상 지원 거부 입장을 밝혀〈본보 20일자 1면〉 U대회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유치 후보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 의지를 의심받게 된 것이다. U대회 정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유치지원금 교부불가는 물론 유치권을 따내더라도 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구축 비용을 추가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U대회 유치를 승인했다.

◇정부 '조건부 승인' 문제점=U대회 정부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19일 '국제체육대회 유치 심사위원회'을 열고 2015년 U대회 유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사위는 ▲유치활동 비용 전액 광주시 부담 ▲경기장 신축 지양 등 최대한 예산 절감 ▲개최권을 얻고 난 뒤 신규 사업비 등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이같은 조건이 오는 12월께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광주시는 자체재원으로 유치 활동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는 참여정부 당시 18억원의 국비를 받아 지난 2013년 대회 유치활동을 벌였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U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지속될 경우 대회 개최지 결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FISU는 대회 개최지 결정의 가장 큰 평가항목으로 유치 희망도시 정부의 지원의지를 꼽는다.

문광부는 또 광주시가 경기장 신축과 대회진행을 위해 제시한 예산 2천90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 없이 대회를 치를 것을 주문,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013년 대회 유치 당시 7개 경기장 신축을 건의했던 광주시는 정부의 예산 긴축 방침에 맞춰 이번에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 등 2개 시설의 신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경기장 1곳만을 신축하고 나머지 2천억원으로 대회를 치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U대회 개최를 통해 폭넓게 구축한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또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됐다.

◇지역 반발=광주시민단체총연합은 20일 '문광부의 2015U대회 광주유치신청 조건부 승인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15U대회 광주유치 성공을 위해 행·재정·외교적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145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광부가 최근 국제체육대회 유치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의 하계 U대회 유치 승인 조건으로 개최권 획득 시 신규사업 요구 중단, 경기장 신설 억제 및 유치활동 비용 광주시 부담 등을 내건 것은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조건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 육상경기 연맹 등 48개 경기단체 전무이사들도 성명을 낸 뒤 '조건부 승인 철회, 범국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기공 20일 광주시 남구 옛 구동체육관 부지에서 열린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기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초청 인사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총 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되는 시민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오는 2010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정비 11% 인상

4,695만원 잠정 결정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4천695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5천16만원보다 10% 낮고 올해(4천231만원)보다 11% 인상된 4천695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는 시의회 의정 활동 수준과 타 시·도와의 의정비 기준액(월정수당) 비교, 광주시 물가수준, 재정자립도, 장기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향후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비를 최종 결정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동철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보증금을 강제 압류 대상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광산 갑)은 20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마저 잃게 될 경우, 재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임차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항목은 채무자의 주거 형태나 형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국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 이유는 집 없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적어도 보증금만큼은 압류대상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서울 전남농산물 직판장서 수입 쇠고기 판매 드러나

전남도가 전남농산물 수도권 판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전남농산물직판장에서 타지역 농산물과 수입쇠고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정환대(민주·곡성2) 위원장은 지난 19일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전남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대부분 타지역 농산물인데다, 이들 농산물도 산지에서 직거래 구매하지 않고 가락동 시장에서 구입·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전남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야 할 직판장이 경상도를 비롯한 타지역 농산물이나 미국산 LA갈비를 취급하고, 산지직거래가 아닌 가락동 시장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현재 경제과학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농림식품국으로 이관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화재 대비 실측작업 거의 없어

전남지역 도지정 문화재 중 화재나 훼손에 대비해 실측작업을 해놓은 문화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석원 의원은 20일 도청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가 소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 지정 목조문화재 198건 중 실측작업이 이뤄진 문화재는 불과 2건에 불과해 실측비율이 1%에 그쳤다"며 "도내 문화재들은 훼손시 원형복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밀실측 도면자료를 구축한 전남지역 문화재는 영광의 영광향교와 영광묘장영당 등 2곳이며 전국적으로도 13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건축물 형태의 문화재는 ㎜단위의 정밀실측을 해놓아야 만약의 경우에 복원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재 정밀실측은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중요문화재들이 훼손되기 전에 정밀실측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발주 공사 잦은 설계변경 309억 증액

전남도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의 사업비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309억여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23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309억2천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1건(178억 원), 일반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공사가 10개소 13건(124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수해복구공사, 도로 포장 및 구조개선사업 등도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변경사유로는 물가변동(E/S)에 따른 증액이 가장 많았으며 주민들의 요청이나 F1경주장 진입도로 교차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도 포함됐다.

설계변경 중에는 원자재 값 급등에 따라 정곡터널 개설공사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대체구입해 사업비 3억7100만 원을 감액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도색방법을 변경해 예산을 줄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 요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남 방문 외국인 9만명 불과 '집안 잔치'했나

올해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 중 외국인은 전체 방문객 중 0.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석원(민주·해남1) 의원은 20일 전남도청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전남도를 방문한 총 관광객 4천275만2천84명 중 외국인은 9만1천178명으로 0.21%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고 '집안잔치'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전남을 방문했다는 외국인은 1.7%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설명하고 "구호로만 '방문의 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